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https://daejeon.pass.or.kr/

매달 한입, 안전이 쌓여요!

안전한입 뉴스레터

2026년 10월호



이 달의 안전 메시지

PASS

2027년부터 달라지는
위험성평가 과태료 기준 알아보아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https://daejeon.pass.or.kr/

Chapter 01.

2027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기준이 시행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기준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2026년 7월 21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관련 사항 공유, 결과 기록·보존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이 포함됐습니다.



사업장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과태료 금액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험성평가가 실제 현장을 반영하고 있는지,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시행 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https://daejeon.pass.or.kr/

Chapter 02.

2027년부터 무엇이 달라질까요?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기준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01 사업장 규모별 시행 시기



50인 이상 사업장 >

2027년 1월 1일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기준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 >

2028년 1월 1일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기준 시행

02 위험성평가 과태료 기준 한눈에 보기

위반행위	1차	2차	3차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의무 위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관련 사항 근로자 공유 의무 위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	50만원	150만원	300만원

단위 : 만 원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 시점이 가까운 만큼,
기존에 실시해온 위험성평가의 운영 방식과 절차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https://daejeon.pass.or.kr/

Chapter 03.

과태료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4가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위험성평가에서 사업장이 관리해야 할 **영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차 500만원 → 2차 700만원 → 3차 1,000만원 으로 정해졌습니다.

02



근로자 · 근로자대표 참여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의 참여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03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공유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근로자에게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04



결과 기록 · 보존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 ·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험성평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절차가 어떻게 운영됐는지까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https://daejeon.pass.or.kr/

Chapter 04.

우리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런 경우라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위험성평가 자료를 이미 갖추고 있더라도 실제 운영 상태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현재 평가가 현장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01



매년 같은 평가표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

작업공정이나 설비, 작업방법이 바뀌었는데도 이전 위험성평가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현재 현장의 위험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담당자가 혼자 위험성평가를 작성하는 경우

실제 작업자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합니다.
따라서 현장 의견이 빠진 채 담당자가 서류 위주로 평가를 작성하고 있다면
근로자 참여 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03



위험요인을 찾았지만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에서 위험성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실제 개선조치로 연결해야 합니다.

04



평가 결과를 담당자만 알고 있는 경우

위험성평가 결과가 문서로만 보관되고 현장 근로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관련 사항 공유 과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https://daejeon.pass.or.kr/

Chapter 05.

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기준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Q1



위험성평가를 하고 있다면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나요?

A 기존에 실시하고 있더라도 평가 내용이 현재 작업환경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근로자 참여·관련 사항 공유·기록 및 보존 등 필요한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는 처음부터 1,000만원인가요?

A 아닙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은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규정됐습니다.

Q3



50인 미만 사업장도 준비해야 하나요?

A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련 기준이 적용되며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입니다.

Q4



위험성평가를 점검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서류의 존재 여부보다 현재 사업장의 실제 공정·설비·작업방법과 평가 내용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근로자 참여, 개선조치, 결과 공유와 기록관리까지 순차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https://daejeon.pass.or.kr/

Chapter 06.

2027년 시행 전,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부터 확인하세요.



위험성평가 과태료 기준이 마련됐다고 해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하는 것이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 위험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존 위험성평가가 현재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출처는 여기를 눌러 확인하세요!

